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논란... 인권 분야 경력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 활동 뿐

정부의 대(對)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할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51)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대테러센터가 공식 출범(6월4일)한 지 50여 일만에 이뤄진 '늦은 인사'인 데다, 공안검사 출신 인사가 인권보호관을 맡게 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과 함께 대테러센터가 출범했지만,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던 한 인권보호관은 50여 일 동안 공석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대테러 활동에만 몰두,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1965년생인 이 교수는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청, 서울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200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같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연수를 다녀왔다.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으며, 같은해 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출신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검찰을 떠난 셈이다.

이 교수는 검사 재직 시절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



여기는 태권도의 고장입니다

21일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스페인과 이란 등 7개국 해외 주요 통신사 언론인들을 무주 태권도원으로 초청해 대회 준비사항 등을 브리핑하며 해외 홍보를 벌였다.

로 일했다"고 언급했다.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었던 2002~2003년에는 그의 밑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03~2006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법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의 저서 중에도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가 있으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령 제 개정 과정과 통일법제 연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분야 경력은 지난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총리실도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위촉될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라면서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도록 정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관련 민원 처리 ▲그 밖에 관계 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직무 수행 중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강제적인 권한이나 조사가 없는 자문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졌던 유익한 인사인 셈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측면에서 정통한 인사"라며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권 분야에서의 학식과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검증과 관련된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선정하고 검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뉴시스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공모

응모 내달 22일~9월2일까지... 업체별 1개 품목

전북도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해 육성하고자 우수상품 20여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응모는 내달 22일부터 9월2일까지다. 인증 기간이 3년인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은 2007년부터 도내 대표상품 인증사업으로 추진한 'Buy 전북상품'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KTX역 특판 행사·지역 축제·박람회 참가, 상품권 운영 등을 할 때 지원을 받는다. 작년에 도지사 인증상품에 선정된 (주)순창장류는 이번 시즌 흡소빙 방송을 통해 5만개의 한식메주 세트를 판매해 20여명의 매출액을 올렸다.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소비자 용품 등으로 업체별로 1개 품목을 업체 주소인 시·군의 기업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민형 기자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할 수 있다

행정부 '문서24'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문서 제출 창구 '문서24' 서비스가 22일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문을 제출하려면 정부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다.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받아 스캔한 뒤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서 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문서24'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제출할 문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 PC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11)과 PDF 파일을 읽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면 된다. 행정부는 먼저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정관변경·허가신청 등)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해수욕객 '해파리' 주의보... 지난해보다 2배이상

국민안전처는 강도성인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출현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파리 등 정보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7월 2주째 기준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율은 지난해(7.94%) 비해 2배이상 높은 20%로 증가했다. /박용주 기자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강도성으로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해 어업과 해수욕객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지난 3년간(2013~2015년) 해파리 등 성 바다동물과의 접촉해 발생한 환자는 총 2216명으로 7월에 308명, 8월 1338명으로 급증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3,029개 확대 설치

전북도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부과하지 않던 선박과 항공기 사용료를 방제비용에 포함시키고, 방제장비 등의 사용료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최근 한국해양대학교 산하협력단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산정기준개선을 마련,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디서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위주 벽면형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물만으로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명판을 설치해 방문객 및 도민 모두가 주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내년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 대폭 인상

연구용역 사업 추진... 선박·항공기 사용료 포함 등

사고 발생시 오염원인자 책임하에 방제작업(배출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오염원인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방

제조치 비용이 민간의 30% 수준으로 오염원인자가 자발적인 방제작비보다는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부의 방제작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염원인자 책임하의 방

제조치가 지연돼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앞으로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선박과 항공기 사용료를 방제비용에 포함시키고, 방제장비 등의 사용료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최근 한국해양대학교 산하협력단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산정기준개선을 마련,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내년부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제거하는 비용이 대폭 오른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경의 방제작비 비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해양오염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